

與, 전대서 '민심 30%' 반영... 단일지도체제는 유지 가닥

당헌·당규특위, 오늘 의견 최종정리
전대 규정, 민심30%·당심70% 변경
황우여 비대위의 '2인 지도체제'
친한계·친윤계 반대로 무산될 듯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30%·당심(당원투표) 70%'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당헌·당규특위)는 10일 당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규정,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 30%·당심 70%'으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변경해야 한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소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11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2인 지도체제' (승계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대대표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석 최고위

원이 당대표 권위 대표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체제와는 다르다. 황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지도부가 6번 바뀐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같은 제도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는 당원주자가 없어 수석 최고위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승계형 지도체제를 두고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보완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 위원장은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며 "부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다툼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특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개정과 지도체제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25일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 중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일단 예상되는 당권주자로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내외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후 당선자·낙선자 등과 만남을 갖고,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리는 등 '뭉클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환)' 분위기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대선 패배 몇 달 후 이재명 당시 전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섰을 당시에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당대표로 대선까지 직행?... 野 당헌 개정안 의결

당대표 등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서
사유 있을 시 시한 변동 예외조항 부의
후 대표 연임·영향력 강화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

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란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당무위에

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러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엔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나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시

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엔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동해 석유·아프리카 외교에도 尹 지지율 31.5%

전주비 0.9%포인트 올라
9주째 30% 초반 박스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31.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9주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발표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6월1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포인트 높아져 31.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8%p 낮아진 65.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9주째 30% 초반 박스권에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4월 2주 차에 32.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로 떨어진 이후 6월 1주 차까지도 중반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30.5%로 마감한 후, 이달 4일에는 32.3%, 5일엔 32.4%, 7일엔 3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했음에도 지지

율 반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주 우드사이드, S&P 등의 광구 장애성 논란', '액티오 신퇴성 의혹' 등으로 깜짝 발표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세션을 주재하는 등 활발한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펼쳤음에도, 지지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5주차 조사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35.6%, 국민의힘은 1.4%포인트 높아진 34.5%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尹, 중앙일보 순방 시작... 김건희 여사 동행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첫 순방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민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11~13일)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올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순방에 동행하

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자켓과 치마 정장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었다.

공방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규 외교부 1차관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 광물, 천연자원, 원전 등의 협력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외교 전략이다. /서예진 기자